

새 정부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 : 추진 전략과 시사점

목 차

1. 서론	/ 01
2. 새 정부 국정계획 개요	/ 02
3.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 분석	/ 07
4. 결론 및 시사점	/ 2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의 형식으로 「국정운영5개년계획(안)」이 발표됨. 국정과제는 정부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으로, 정책자원 배분과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됨(박재완, 2016)
- 국정과제 분석은 개별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정책구조 하에서 특정 영역의 정책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진단 할 수 있음(Giddens, 1984). 또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은 실효적 정책 집행 및 제도화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정책적 수용성과 제도적 내재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능함(Cairney, 2015)
- 디지털전환, 금융환경, 환경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이를 대표하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정책이 가지는 위상을 진단하고 전략적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음
 - 최근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 카드사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짐
 - 또한 소비자정책은 국민 생활 전반과 긴밀히 연관된 분야로서, 안전·정보·교육·피해구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개인정보·금융 환경 등 새롭게 등장한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다차원적 정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1.2 연구의 목적

- 이상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속에서 소비자정책과 교차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소비자정책이 단일 부처의 영역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탐색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새 정부 국정계획 개요

2.1. 국정계획의 체계와 특징

- 새정부 국정계획은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의 3단 체계로 편성됨
 - 새정부 국정계획은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음¹⁾

1) 2025년 9월 현재 국정과제까지 공개됨

〈그림 2-1〉 국정과제 체계도



- 부처별 소관 국정과제 수의 편차가 있으나, 국정계획은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국정과제 역시 범정부 차원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부처별 소관 과제²⁾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1개), 행정안전부(9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7개), 금융위원회(7개) 등이 다수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 반면 1~2개의 소관 과제를 가진 부처도 있어 부처 간 편차가 존재함
 - 이러한 편차는 국정과제의 무게중심이 삶의 질, 미래역량, 기술혁신 등의 영역에 있음을 보여주며, 복지·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핵심 추진축임을 의미함

2) 단독 소관 기준

- 이러한 편차와 관련, 특정 부처에 과제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복지·과학기술금융 등 최근 사회 변화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정계획 및 국정과제는 부처별 단편적 과제의 집합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종합계획이자 지침이라는 점에서 소관보다는 과제의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2.2. 국정과제 키워드

□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

- 국정과제의 정책적 성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³⁾) 기법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함
- 텍스트에 대한 워드클라우드⁴⁾ 분석 결과 ‘환경’, ‘지속 가능’, ‘취약 계층’, ‘기술 개발’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⁵⁾, 이와 함께 ‘첨단 기술’, ‘바이오 헬스’, ‘디지털 자산’ 등의 개념도 부각되고 있어, 이는 국정과제가 기존의 경제·사회 분야를 넘어 신규 의제까지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함

3) 비정형 또는 반정형화된 텍스트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하거나 정보를 생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함(Feldman & Dagan, 1995)

4)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분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단어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핵심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줌

5)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과정에서는 environment, condition, circumstance등 상이한 개념이 모두 ‘환경’으로 중첩 표기되는 등 일부 개념에서 빈도가 과대 산출되는 등의 한계가 있으나, 국정과제 전반에서 빈도가 높은 주요 개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활용성을 가짐. 이하의 본 분석에서는 단순 빈도 산출 결과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국정과제-소비자정책 연계성 분석과정에서는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과 복합어 중심의 키워드 매팅, 맥락별 의미 구분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중복 효과를 보정하였음

〈그림 2-2〉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 다빈도 개념 중 피해 구제, 개인정보, 취약 계층, 공정 행위, 지속 가능, 순환 경제, 바이오 헬스, 디지털 자산 등 소비자정책의 주요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정책이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교차되는 영역이 많음을 나타냄

2.3. 정책환경변화와 소비자 정책

-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짐. 산업·디지털·기후변화 등은 단순히 해당영역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안전·선택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중에는 소비자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 신유형 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및 안전 위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①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플랫폼 거래 공정성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대두시켰으며, ②금융산업의 개방과 신금융 서비스 확산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높임. ③기후위기와 국제적 ESG·탄소중립 규범 강화는 지속가능 소비와 환경정책의 소비자 관점의 함의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는 등 소비자정책의 필요성은 점차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정책을 전통적 영역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종합적 기능으로 확장 시킬 것을 요구함
- 따라서 국정과제 속에서 소비자정책과 교차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부처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임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정책이 법정부 종합계획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 분석

3.1. 연구방법 및 분석체계

□ 분석대상

- 국정계획: 2025년 8월 발표된 「국정운영5개년계획(안)」의 123개 국정과제 전문(과제명+세부 설명문)
- 소비자정책: 역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주요 법률(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정책자료, 해외자료(OECD, UN) 등

□ 분석절차

- (1단계) 전처리(Preprocessing)⁶⁾: Python 기반 KoNLPy·Mecab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전문을 분해하고, 불용어 제거 및 단어 정제를 실시함
- (2단계) 키워드 사전 구축: 소비자정책 관련 키워드를 명사복합명사 중심으로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국정과제와 비교 가능하도록 구조화함
 - 소비자정책 키워드는 제1~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주요 연구·조사 보고서, OECD·UN 등 국제기구 소비자정책 자료, 학술 연구문헌 등을 종합하여 구축함
 - 특히 법령·보고서 등을 통해 공통 핵심어를 정리하고, 학술논문·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문제(플랫폼 거래, 개인정보, 구독경제 등)를 보완함

6)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데이터 분석을 위해 형태소를 세분화하고 불용어를 제거하는 것(Karl et al., 2015)

- 추출 과정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반 키워드 후보군을 확보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불용 키워드를 제거하고 정책적 의미가 명확한 단어를 선별함
- 이 과정을 통해 약 100여 개의 최종 키워드가 확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키워드 사전은 전통적 영역(안전,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과 신규 영역(디지털, 금융, 환경·지속가능,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구조로 마련되었음

〈표 3-1〉 소비자정책 키워드 도출 예시 (출처별 구분)

출처	주요 키워드
법령·제도	계약철회,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약관규제, 온라인거래,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허위광고, 과장광고, 환불, 교환, 리콜, 안전표시, 제품안전, 소비자기본권, 소비자주권, 권리구제,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불완전 판매, 전자금융 사기 등
정책문서	다크패턴, 디지털콘텐츠 거래, 알고리즘 투명성, 자동결제, 플랫폼거래, 생활안전, 정보공유, ESG 소비, 금융리터러시, 녹색소비, 디지털격차, 순환경재, 지속가능소비, 소비지표, 소비자포털 등
학술연구	맞춤형 소비, 사회적기업, 소비자문화력, 소비자 역량, 정보접근성, NGO참여, 공익소송, 집단소비자운동, 소비자단체 등
사회이슈	AI의사결정, 구독경제, 그린워싱,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인앱결제, 중고거래, 탄소라벨링, 기후위기대응 소비,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주권, 제로웨이스트, 탄소발자국,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AI워싱, 슈링크플레이션 등

○ (3단계) 매핑 및 연계성 도출:

-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⁷⁾를 적용하여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

7) TF-IDF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단어의 출현빈도를 보정하는 방식.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가중치를 낮게, 특정 부분에 한하여 두드러지는 단어는 가중치를 높여 문서 간 차별적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

- 레벤슈타인 거리(Levenshtein distance) 기반 퍼지 매칭(Fuzzy Matching)⁸⁾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텍스트와 소비자정책 키워드 간 문자열 유사도를 측정
- N그램(N-gram)⁹⁾ 및 워드트리(wordtree) 기법을 통해 복합어·연관어를 식별

○ (4단계) 지표¹⁰⁾ 산출:

- Link Score = (빈도 × 가중치 × 유사도)를 통해 연계 강도를 정량화
- Coverage Ratio = (연계 과제 수 ÷ 전체 과제 수) × 100을 통해 부처별 소비자정책 연계 범위를 지표화

○ (5단계) 보정 및 보완

- 워드클라우드 및 빈도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대계산 현상을 사용자 정의 사전과 복합어 중심 매팽을 통해 보정 하였으며, 키워드 기반 매칭이 문맥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성적 검토자문을 병행하여 결과를 보완함
- 연계도가 높은 과제(TopDocs)를 별도로 도출하여 심층 검토 대상으로 활용함

□ 분석시 고려사항

○ 본 연구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자 텍스트마이닝·퍼지매칭 등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그러나 이는 연구자 및 전문가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분석과 질적 검토 간의 균형을 통해 해석의 설득력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 방법론적 고려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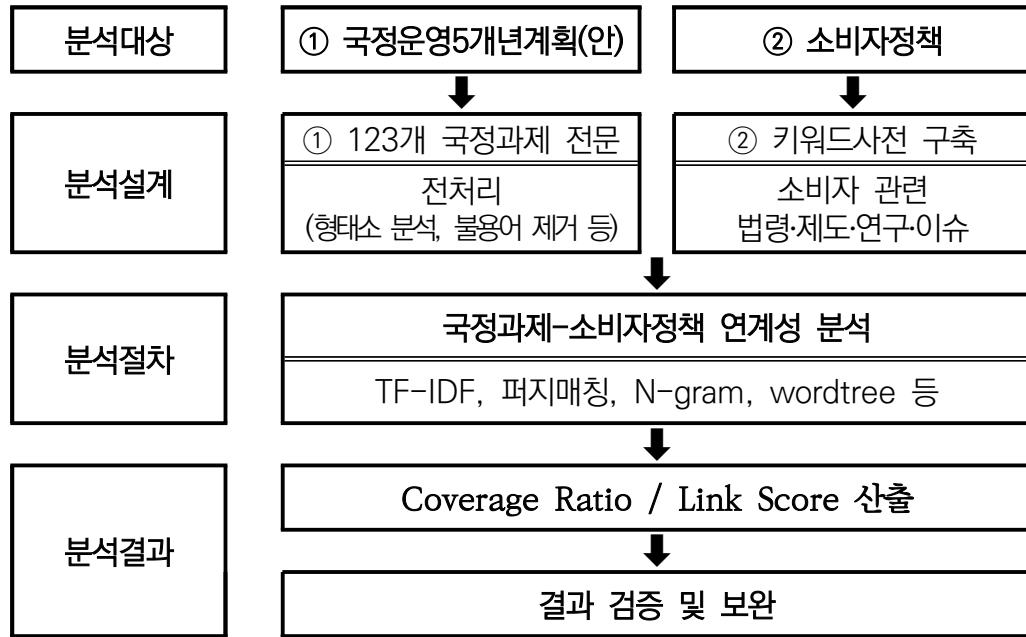
8) 레벤슈타인 거리는 두 문자열 간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한 퍼지 매칭은 표기 차이나 오탏가 있어도 유사 항목을 식별할 수 있어 텍스트마이닝 및 정책 문서 분석에서 용어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됨

9) 단어 연관성 분석(Term Association Analysis) 기법 중 하나로 키워드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연결성을 확인하는 방법

10) Coverage Ratio와 Link Score는 분석 지표명으로, 번역 시 개념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영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11) 정량적 분석과 질적 해석을 병행하는 접근은 정책분석 및 사회과학 연구에서 흔히 활용되는 혼합방법론적 시각과도 일치함(Creswell & Plano Clark, 2017; Dunn, 2018).

〈그림 3-1〉 분석체계도



3.2. 분석결과 및 종합논의

□ 연계성 분석 개요

- 정책 연계성 분석은 단순 빈도 기반 비교를 넘어, 정책 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과 거버넌스 이론(governance theory)의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음(Howlett & Ramesh, 2003). Coverage Ratio는 부처별 과제 내 소비자정책 관련성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계의 ‘폭’을 의미하며, Link Score는 소비자정책 키워드와의 연계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계의 ‘밀도’를 보여줌. 두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연계 여부를 넘어, 정책적 영향력과 내재화 수준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음¹²⁾

- 국정과제 전문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키워드 사전을 매핑한 결과, 총 123개 과제 중 89개가 연계 과제로 도출되었음
- 이는 소비자정책이 국정 전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디지털·금융·환경·안전 등 신규 의제와의 교차가 뚜렷하게 확인됨

3.2.1 Coverage Ratio 결과

□ 부처별 Coverage Ratio 및 특징¹³⁾

- 123개 국정과제 중 연계 과제 89개(연계율 72.4%)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정책은 디지털 · 금융 · 환경 · 시장질서 등 핵심 국정 의제의 중심축과 폭넓게 교차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정책이 범부처 정책 설계 단계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 Coverage Ratio 상위 부처(85~100%)
 - 부처별 Coverage Ratio를 산출한 결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교육부 등 다수 부처의 국정 과제에서 소비자정책과의 연계가 높게 나타남. 이는 복지·금융·디지털·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이 소비자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시사함

12) 단, Coverage Ratio와 Link Score와 같은 정량 지표는 국정과제 서술의 특성상 실제 연계성을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도 불용어 처리, 복합어 매핑 등의 절차적 한계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텍스트마이닝 및 문자열 유사도 기반 분석의 일반적 한계로 지적됨 (Jurafsky & Martin, 2023; Karl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퍼지 매칭 기법,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잠재적 오차를 일정 수준 보정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13) 보다 상세한 내용은 ‘〈표〉 중위 집단 과제(60개) 부처별 요약’ 참고

- 의료·돌봄, 금융, 디지털, 주거, 환경, 공정거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소비자정책이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내재화됨
- 금융위·공정위·개인정보위는 규제·감독 중심의 직접적 권익 보호, 복지부·환경부는 생활안전·지속가능성 확보, 과기정통부는 신산업·디지털·신뢰성 강화라는 정책적 특징을 가짐

○ Coverage Ratio 중위 부처(65~85%)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등의 부처에서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이 일정 수준 확인됨
- 민생경제, 안전·재난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가족·청소년 보호, 부처 간 조정과 같은 과제를 통해 소비자정책과 일정한 접점을 형성함

○ Coverage Ratio 하위 부처(50% 이하)

- 반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은 Coverage Ratio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¹⁴⁾
- 이는 해당 부처 과제들이 전통적으로 거시적 안보·외교 정책에 치중되어 직접적인 소비자정책 연결이 약하기 때문임
- 다만 재난 안전, 정보 제공, 환경 관리 등 직·간접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 설계 시 소비자 관점의 잠재적 연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

14) Coverage Ratio는 부처별 전체 과제를 분모로 하여 산출되므로 부처별 과제 수 규모와 편차에 따라 절대값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 단, 부처 과제의 상당수가 소비자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관하게 보이는 과제에서도 일정한 접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를 가짐

〈표 3-2〉 부처별 Coverage Ratio 현황

부처	국정 과제수	연계 과제	연계율	부처	국정 과제수	연계 과제	연계율
감사원	1	0	0.0	방송통신위원회	2	2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00.0	법무부	2	1	50.0
경찰청	1	0	0.0	법무부/경찰청	1	1	100.0
고용노동부	6	3	50.0	국가보훈부	2	0	0.0
공정거래위원회	2	2	100.0	보건복지부	11	10	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6	85.7	산업통상자원부	6	6	100.0
교육부	5	5	100.0	여성가족부	3	2	66.7
국방부	5	1	20.0	외교부	4	2	50.0
국무조정실	6	4	66.7	외교부/재외동포청	1	1	100.0
국토교통부	4	4	100.0	국가인권위원회	1	0	0.0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	0	0.0	인사혁신처	1	0	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00.0	중소벤처기업부	4	3	75.0
국민권익위원회	1	1	100.0	통일부	5	1	20.0
금융위원회	7	7	100.0	해양수산부	3	1	33.3
기획재정부	5	4	80.0	행정안전부	7	5	71.4
농림축산식품부	4	4	100.0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1	0	0.0
문화체육관광부	5	5	100.0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1	1	100.0
방위사업청	1	0	0.0	환경부	5	5	100.0
종합							
전체 국정과제수	연계 과제수			연계율			
123	89			72.4			

- 이상의 Coverage Ratio는 부처별 정책의 소비자 관련성의 폭을 보여주며, 폭이 넓은 부처는 소비자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폭이 좁은 부처는 새로운 연계 접점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함

3.2.2 Link Score 결과

□ 과제별 연계 강도 분포

- 연계 과제 89개를 Link Score 분포에 따라 상위(15개), 중위(60개), 하위(14개)로 구분함¹⁵⁾
- 상위 집단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과제로, 디지털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ESG·지속가능소비, 플랫폼 거래 등 최근 등장한 소비자 이슈와 밀접히 연관됨
- 중위 집단은 전통적 소비자정책(안전,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과 신규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 연계성을 보이는 과제들이 포함됨
- 하위 집단은 소비자정책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로 구성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잠재적 연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3-3〉 Link Score 분포에 따른 상·중·하위 과제군

구분 (과제수)	해당과제 예시 ¹⁶⁾ 및 주요특징	
상위 집단 (15)	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_공정위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_금융위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_개인정보위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_과기정통부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_기재부. 등.

15) Link Score는 절대적 기준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계 과제(89개)의 분포를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상대적 수준을 구분하였음. 평균+1 σ 이상은 상위 집단(15개), 평균-1 σ 이하는 하위 집단(14개), 그 사이를 중위 집단(60개)으로 정의함. 본문에서는 상위 집단(평균+1 σ 이상)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 중위 집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특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이 구분은 연계성이 뚜렷하게 높거나 낮은 과제군을 식별하기 위한 실무적·분석적 기준이며, 통계적으로도 정규분포 가정 시 약 68%가 평균 $\pm 1\sigma$ 내에, 상·하위 약 16%씩이 구간 밖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구분 (과제수)	해당과제 예시 ¹⁶⁾ 및 주요특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안전, ESG·순환경 등 소비자정책의 전략적 핵심 의제와 직결되는 과제군 -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이 강하게 교차하는 지점 - 정책 설계·집행 단계에서 소비자정책 관점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
중위 집단 (60)	과제	<p>(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_금융위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_복지부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_국조실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_농식품부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_국토부. 등.</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소비자정책(안전, 피해구제, 정보제공)과 신규 이슈(플랫폼 규제, 디지털 접근성 등)가 혼재된 과제군 - 점진적 반영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정책 관점의 정책적 고려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영역
하위 집단 (14)	과제	<p>(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_과기정통부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_고용부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_산업부. 등.</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소비자정책 키워드와의 연계성이 낮으나, 산업·에너지·노동 등 거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과제군 - 단기적 연계성은 낮으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 접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영역

□ 상위 집단(15개 과제) 심층 분석

- 평균+ 1σ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과제로, 디지털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ESG·지속가능소비,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거래 등 핵심 의제를 포함함
- 이들은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이 전략적으로 만나는 접점으로, 정책 설계·추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임

16) 전체 국정과제 목록은 별도 첨부 자료 참고

〈표 3-4〉 Link Score 상위 집단(15개) 주요 특징

국정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소비자정책 연계	
			Link Score	주요연계점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1,159.8	불공정거래 근절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금융위	816.1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및 불완전 판매·사기 예방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700.4	공정경쟁 기반 강화와 신뢰받는 시장 환경 조성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517.7	가계부채 관리로 금융소비자 안전망 확보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 정보위	436.0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405.4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68	국민 먹거리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식품 신뢰도 향상	농식품부	360.6	먹거리 안전 확보와 소비자 식품 신뢰도 향상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329.8	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소비자 체험 확대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320.6	자원순환 촉진과 지속가능 소비 확산
67	기술탈출하는 균형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316.4	기술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소비자 동반 보호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311.8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로 소비자 교육 역량 확대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307.1	친환경 산업 전환과 지속가능 소비 기반 마련
44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환경 구현	환경부	295.4	생활환경 개선과 소비자 안전·건강 증진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 부	256.4	AI 활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책임 체계 확립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247.7	물가 안정과 소비자 생활 안정 지원

□ 중위 집단 과제 검토

- 중위 집단($\pm 1\sigma$ 구간)에 속하는 과제는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과제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과제 수행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되는 과제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이들은 전통적 소비자정책과 신규 의제가 혼재된 성격을 띠며, 지속적 협력과 점진적 반영이 필요한 과제군으로 분류됨
- 생활안전, 디지털 접근성, 소비자 정보제공 등 점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 포함됨
- 중위 수준의 연계성을 보이는 과제들은 개별 과제 단위로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과제를 포함하는 부처 단위의 국정과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 과제별 나열은 연계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용이함. 그러나 부처별 검토는 부처의 소비자정책과의 접점이 형성되는 구조를 파악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할 때 소비자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활용성이 높아짐
 - 이하의 표에서는 중위집단을 대상으로 부처별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에서 소비자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표 3-5〉 중위 집단 과제(60개) 부처별 요약

부처	과제수	주요 연계내용
보건복지부	7개	- 장애인 권리 보장,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고령사회 대응 등 -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금융위원회	5개	-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형성,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등 -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과 금융 접근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 기초연구, AI 선도기술,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인재 양성 -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기반 소비자 보호
교육부	4개	- 시민교육, 학교자치, 지역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 소비자 교육·리터러시와 권리 인식 확산
국무조정실	4개	- 신산업 규제 재설계, 규제 합리화, 지속가능발전 기반 - 시장질서 투명성과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국토교통부	4개	- 주거복지, 모빌리티, 주택시장 안정, 도시개발 - 주거 안전과 교통·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리 보호
환경부	3개	-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위기 대응 - 지속가능 소비와 환경 안전
기획재정부	3개	- 서비스업 경쟁력, 사회연대경제, 민생경제 지원 - 소비자 생활비 경감과 공정경제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3개	- 농산어촌 균형발전, 동물복지, 안전한 먹거리 - 식품 안전과 지속가능 소비
문화체육관광부	3개	- K-컬처 산업화, 생활체육, 국민 문화향유 - 콘텐츠 소비자 권리, 문화 접근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3개	-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 산업·에너지 정책의 소비자 안전·지속가능성
행정안전부	3개	- 재난안전관리, 재난 예방·대응, 지방재정 확충 - 재난대응 체계와 지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망
고용노동부	2개	- 노동대전환, 차별 없는 일터 - 노동소비자 권리, 근로환경의 공정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	2개	- 혁신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2개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공공성 회복 - 정보 접근성, 공정한 콘텐츠 이용 환경
여성가족부	2개	- 청소년 성장, 가족지원, 여성 안전·건강권 -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안전 보장

※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법무부, 법무부/경찰청,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각 1개

- 민생 안전, 권리 보호, 제도적 신뢰 확보 등 소비자정책과 간접적 접점

- 중위집단에 해당하는 부처들은 Coverage Ratio는 일정 수준 확보하였으나, 연계의 강도는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이는 소비자정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과제보다는, 민생경제 관리·재난안전·복지·교육·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이 간접적·보완적 성격의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해석상, 중위집단을 구성하는 부처와 과제들의 경우 소비자정책을 매개로 민생·복지 등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보완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 경우 소비자정책의 내재화 수준은 아직 제한적이나, 범부처 정부 협력 구조 속에서 연계성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부처별 정책 방향에 소비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

3.2.3 종합 논의

- 디지털·금융 등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 관점의 고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 Coverage Ratio는 소비자정책이 얼마나 많은 부처 과제와 접점을 형성 하는지를 보여주고, Link Score는 그 접점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두 지표를 함께 고려할 때, 단순한 연계 여부를 넘어 각 부처의 정책 내재화 수준과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소비자정책은 기존의 피해구제·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국민 권리 보장, 시장 질서 확립, 시스템 리스크 대응이라는 종합적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금융·환경 영역에서 신규 소비자 이슈와의 접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소비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밀접히 연계됨
 - Coverage Ratio와 Link Score 모두 높은 부처들이 주로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정책 내재화 수준이 가장 진전된 분야로 평가됨

- 연계된 국정과제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다수 부처의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정책과의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이 특정 부처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다루어 지기 보다는 범정부적 성격의 정책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부 등은 Coverage Ratio와 Link Score 모두 높아 핵심 내재화 부처로 기능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은 Coverage Ratio는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으나 Link Score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정책과의 연계 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Link Score와 Coverage Ratio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정책은 국정과제 전반에서 정책 설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상위 집단 과제는 공정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AI 신뢰성, 환경·에너지 안전 등으로, 단기·중기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영역임
 - 중위 집단 과제는 복지, 교육, 지역균형 등으로, 점진적·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됨
 - Coverage Ratio와 Link Score 모두 낮은 부처들도 안전, 정보, 환경 관리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국정과제별 소비자정책의 연계성이 입증된바, 국정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소비자정책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적임

4.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새정부 「국정운영5개년계획(안)」을 구성하는 123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 내용분석 기반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 간 연계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소비자정책은 단일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범정부 종합정책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디지털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지속가능 소비 등 신규 의제와의 접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관점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 국정기조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정책은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영역에 접점을 가지는 분야임. 따라서 국정 운영의 부차적 과제가 아닌 범정부 핵심축으로 재정립해야 하며, 국정 원칙·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AI, 혁신, 산업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정책은 피해 구제나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신규 영역(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금융, 플랫폼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다차원적 쟁점(금융소비자 안전, 알고리즘 투명성 등)에 대응하는 부처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법정부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과 집행력 측면에서 실질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특정 부처 중심의 기본계획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법정부 계획 체계로 전환 하는 동시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공정경쟁 및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구조적으로 보장되고 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설 협의 구조의 구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 소비자 관점이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음. 특히 산업 및 경제성장 전략과 소비자보호 전략이 대립적 과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대립이 아닌 보완적 관계로 통합·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아울러, 국정과제 수준 뿐만 아니라 하위 실천과제와 같은 보다 세부과제 단위에서 소비자정책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부 차원의 세부과제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결정권자의 ‘공정 경제’, ‘소비자주권 강화’ 경험과 성과를 국정 운영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정책은 광범위한 정책영역과 연계되고 그 정책효과는 국민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이면에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정책 영역임

-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정책 영역의 특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경기도지사의 '공정국' 신설과 이에 따른 조직 내 소비자 전담부서 신설·확대를 통해 공정 경제 및 지역 소비자보호 및 주권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경기도 사례의 조직·예산·인력 등의 자원 확대를 통해 드러나는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 의지와 관심은 지역소비자정책의 가시적인 발전으로 연계되어, 경기도 소비자정책은 '자체 제품안전성 검사', '도민 자율조정 분쟁해결 제도의 도입'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혁신적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소비자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음
-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기반한 이러한 경험은,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공정 경제,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시사점은 '27~'29년 시행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 동 계획은 새정부의 '공정과 신뢰', '국민의 안전하고 품위있는 삶'이라는 국정 원칙과 국정 목표를 실현할 핵심 수단이자, 동시에 그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계획임

○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다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책결정자와 국정 최고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본 연구는 공개된 국정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료 범위와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정밀한 분석과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 간 연계성을 정량·정성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짐.

향후에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별 세부과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네트워크 분석 등 확장된 방법론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의 위상을 정교하게 규명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제1~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박재완 (2016). 「정부전환기 국정기조의 형성과정: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4), 31-63. 한국행정연구원.
- 방민석 (2016).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27-57. 한국정책과학학회
- Cairney, P. (2015). How can policy theory have an impact on policymaking? The role of theory in policy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93(2), 1-16.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Sage.
- Dunn, W. N. (2018).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Routledge.
- Feldman, R., & Dagan, I. (1995).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DT)」. *Proceedings of the KDD*, Vol. 95, 112-117.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wlett, M., & Ramesh, M. (2003).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Jurafsky, D., & Martin, J. H. (2023).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Speech Recognition* (3rd ed. draft). Stanford University.

- Karl, A., Wisnowski, J., & Rushing, W. H. (2015). 「A practical guide to text mining with topic extra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7(5), 326-340.
- OECD (2022). Consumer Policy Toolkit for the Digital Age. OECD Publishing.
- UNCTAD (2015).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United Nations.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별첨) 국정과제별 소비자정책 연계성

- * 국정목표: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연계 순위	link score 집단	국정 과제 번호	국정 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부처
1	상	65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2	상	66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3	상	64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4	상	58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5	상	25	②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6	상	38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7	상	68	③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민 먹거리자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8	상	107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9	상	42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순환경 생태계 조성	환경부
10	상	67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11	상	99	④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12	상	41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13	상	44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14	상	23	②	AI 3대 강국 도약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15	상	60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16	중	82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17	중	59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18	중	108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19	중	40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20	중	46	②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금융위
21	중	48	②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22	중	79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23	중	88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24	중	100	④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25	중	33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브네상스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26	중	98	④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27	중	102	④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28	중	27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29	중	103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30	중	36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브네상스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중	29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브네상스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32	중	81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33	중	19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34	중	70	③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35	중	72	④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36	중	80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37	중	63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38	중	7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39	중	35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40	중	22	②	AI 3대 강국 도약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41	중	106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42	중	73	④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43	중	32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44	중	86	④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45	중	31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46	중	45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47	중	30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48	중	15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49	중	6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50	중	104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화부
51	중	20	②	AI 3대 강국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52	중	112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53	중	21	②	AI 3대 강국 도약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54	중	53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 기재부
55	중	74	④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 경찰청
56	중	62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57	중	39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58	중	84	④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59	중	43	②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60	중	57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61	중	87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62	중	92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63	중	93	④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64	중	69	③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65	중	101	④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66	중	55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67	중	89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68	중	16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69	중	47	②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70	중	83	④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71	중	85	④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72	중	61	③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증기부
73	중	71	③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74	중	14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75	중	18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76	하	75	④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77	하	28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78	하	50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 행복청
79	하	105	④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80	하	77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81	하	78	④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82	하	91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83	하	37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혼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84	하	120	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85	하	121	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경제 안보 ·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86	하	123	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재외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87	하	116	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88	하	24	②	AI 3대 강국 도약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89	하	54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	무연계	5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	무연계	4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	무연계	94	④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	무연계	95	④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	무연계	96	④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	무연계	26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	무연계	2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	무연계	109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	무연계	110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	무연계	111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혁립	국방부
-	무연계	1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	무연계	9	①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	무연계	51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	무연계	17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	무연계	113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	무연계	3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경찰개혁 완성	법무부
-	무연계	11	①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	무연계	12	①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	무연계	90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	무연계	97	④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	무연계	119	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	무연계	122	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	무연계	8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	무연계	13	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무연계	34	②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	무연계	114	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	무연계	115	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	무연계	117	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	무연계	118	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	무연계	76	④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무연계	56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	무연계	10	①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무연계	52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무연계	49	③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 국토부